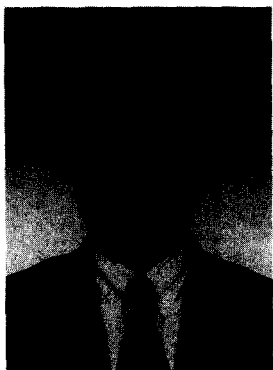


개방자율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이 승 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目 次 ■

1. 국가경쟁력 현황
2. 낮은 국제화수준 : 원인과 대책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선도적 역할
4. 경쟁력의 인프라인 정부기능의 효율화
5.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6.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

1. 국가경쟁력 현황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주도해 오던 GATT체제를 대체하여 올해부터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체제는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비관세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에서의 차별대우를 폐지하여 과거 무역자유화 노력을 포괄하는 보다 자생력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은 우리 산업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라는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이 악화될 때에도 정부정책에 의존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간 경제교류의 확대, 민주화, 노사갈등 등에 따른 임금상승과 경제전체의 안정성 저하 등의 원인으로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오늘날의 국제화·개방화라는 상황은 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아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하게 만든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에서 발표한 '95년 국가경쟁력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24위로 말레이시아(21위)에 까지 뒤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력 없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반하여, 아시아권에서 우리의 경쟁대상국이었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체 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IMD에서 평가한 것보다 더 낮은 29위로 나타났다. 성장과 수출에는 성공했지만 개방과 투자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 분석은 행정과 금융이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근면한 근로자와

기업정신이 강한 기업인들 때문에 더 이상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시장간섭과 기업의 경쟁기피가 부른 비효율을 지적하였다.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운영방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의 실태를 점검하여 철저한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인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 원인과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본 후,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분석하고 경제성장에 있어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해 본다.

2 낮은 국제화 수준:원인과 대책

과거 폐쇄경제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선진국들의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개도국 자체의 보호와 정부지원, 풍부한 국내부존노동력, 저렴한 기술도입, 안정적인 외자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개도국 발전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각의 변화와 국가간 상호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하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 IMD에서 발표한 '94년 국가경쟁력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자국보호주의, 외국인차별, 문화적 폐쇄성으로 국제화 수준이 39위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저수준의 평가 원인으로 먼저 해외진출에 비해 대외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개방경제하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의 주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정부의 보호아래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으나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통상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전략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통상압력을 받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폐쇄적이고 국제화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대외경제전략은 관료중심의 인적·물적 기반확충에만 매달려 있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여 비효율적인 시장에 경쟁압력을 가하며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외경제 전략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여 외국 선진기술의 유입과 외국인 투자기회를 막게 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가장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동남아·중국 등으로 해외이전을 함으로써 이들 나라들로의 기술·지식·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회는 이들 나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외국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자본의 공급원으로 경영의 통제력을 장악하기 쉬운 외자도입을 외국인 투자보다 선호하였으며, 토지취득의 어려움과 높은 땅값, 잦은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 등 고비용을 초래하는 경제적 여건, 외국문화와 기업에 대한 배타성과 복잡한 정부규제 등 외국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인식, 관행 및 제도 등 사회적 요인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때는 국내의 경제적 여건과 시장의 잠재성에 의해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 유입이 1990년대 초 이후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즉, 생산으로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의 개별활동이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의존적 경제관계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상품과 품질로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외국의 기존경쟁자의 문

을 최대한 잠식함으로써 우리만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꾀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대외경제관계로 말미암아 대일 무역역조, 불안정한 자원공급체계, 높아지는 기술보호요구,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가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 원인 중의 또 다른 하나로 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협력이나 경제진출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이 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유출된다는 이유로 해외투자를 소홀히 하였다.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의 가입 후 선진지역에 대한 수출확대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진출이 경제의 성장과 국제화를 달성하는데 더욱 큰 비중과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과 동구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향만, 에너지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 협력상대국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떨어진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제화 시대에 자신감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강한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반면 기업설립시 요구되는 필요 이상의 서류, 장기간의 설립 기간 등 꼭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제도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기업들이 실제 국내 기업활동에서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1〉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절차수(단계)	60	9	20	46
연처리기간(일)	1,000	175	245	492
구비서류(종류)	312	23	238	325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1994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대외경제전략의 변화를 주도하고 질서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먼저 기업은 개방확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지원 없이도 경쟁력 있는 외국의 선진기업들을 국내시장으로 적극 끌어들여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국제화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초엔고의 어려움을 겪는 첨단자동화설비를 갖춘 일본기업의 국내유치를 적극 강화하여 우리의 생산기술수준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해외로의 동반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선진기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개방하거나 개방의 영향이 적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형평논리에 의한 유치보다 경쟁적 논리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외국 선진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개방은 국내의 가격차가 큰 시장부터 가격차가 적은 시장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경쟁력 격차가 큰 기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선도적 역할

과거 고도성장기간 동안 유망산업이 빠른 속

도로 변화여 왔기 때문에 국내기업들로서는 수직계열화보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투자규모의 대형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경쟁압력의 증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각화전략과 전문화전략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인 새로운 형태의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흔히 대기업 병이라 불리는 조직의 관료화 현상은 사업부문의 세분화,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의 형성, 절차 및 규정의 복잡화 및 지나친 규격화, 그리고 의사결정의 집중화 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장점인 인력 및 자금 등 경영자원면에서의 비교우위와 중소기업의 장점인 기획 포착의 민첩성 및 기민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기업을 마치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쟁압력의 증대나 개인의 창의성 및 자발성을 증시하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지 않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와 연봉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협력관계에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방적인 기업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기업간에도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과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의 증진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기술습득과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된다.

기업의 매수합병 가능성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M & A 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경영감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남겨놓고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내의 각종 매수·합병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4. 경쟁력의 인프라인 정부기능의 효율화

지난 수십년 동안 고도성장위주의 정부주도 경제운영방식에 의해 도입·확산되어온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는 WTO체제 출범 등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보다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3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경제시대에 적합하게 제정된 법과 제도가 확대된 경제규모하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이나 공무원들은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

〈표2〉

우리나라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인 이유

(%)

	기업인	공무원
제도·정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 안됨	47.7	54.1
부적절한 방법(제도·정책)으로 개입	26.4	19.9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	11.3	11.1
불필요한 부분에 과도히 개입	6.7	9.4
보다 적극적/과감히 개입 못해서	7.5	5.1
기타	0.3	0.3

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표 참조).

자료 : 김재홍·홍성중, 「정부규제에 관한 기업인과 공무원의 인식조사」, 한국경제연구원, 1993.

1) 규제완화의 가속화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의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더욱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과거 정부의 수동적 추진과는 다르게 규제완화 정책이 단순히 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3,000여건이라는 규제완화의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현재 기업활동에 정부가 간섭하고 있는 정도는 '94년 IMD보고서에 의하면 평가대상 41개국 중 2위로 정부간섭이 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산업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순위는 3위, 기업투자에는 정부규제가 가장 심한 편인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제도나 비즈니스 발전을 방해하는 정도는 4위이며, 상품가격이 정부의 가격규제에 의해 가장 심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투명치 못한 순위는 9위이며, 정치체제가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는 5위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인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진입규제나 가격규제가 여전히 규제로 남아 있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단지

기업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의 규제완화는 경쟁 혹은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가격규제가 적용되는 산업의 경우 대체로 규제를 통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규제인 금융, 토지 및 공장건축, 노동관련 규제는 정책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핵심적인 규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근본원인은 자율보다는 통제 위주로 경제운용을 하고 있고, 규제중 중요부분을 정책적 규제성역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은 규제완화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기준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경영 코스트를 상승시키며, 이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는 기업들에게 행정비용의 상승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규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경영·생산코스트, 시간, 기획 등에서의 손실을 가져오므로써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볼 때 국가경쟁력을 위한 규제완화는 다음과 같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먼저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핵심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과당경쟁, 유치산업보호 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진입규제는 철폐해야 하며, 가격규제를 폐지하여 공산품가격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적인 정책적 규제를 선정하여 완화해야 할 것이다. 낡은 규제체계 전체 중 불가피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모두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규제완화작업은 부처간의 경쟁적인 위원회 설립으로 중심을 잃고 민간이 규제완화 작업에 참여해 있으나 그 참여 부분이 미미하다. 규제완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강력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민관합동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제규제를 만들 때에는 해당부처가 입안 당시에 규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편익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지게 될 부담 혹은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각종 기법을 개발하여 규제정책결정이 여론이나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비용편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결과 규제가 파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을 일정규모 이상 초과하는 규제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직속의 예산관리처(OMB)의 심의를 거쳐 입법화시키는 제도가 관행화되어 있다.

2)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 제고, 정부의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 외에도 정부는 그 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무한 경쟁시대의 정부기능은 민간경제활동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줄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규제위주의 정책들로 인하여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존속될 필요성이 없는 정부 부처 혹은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부처에서 만든 규제들에 의한 행정지도가 비능률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내 중복된 업무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도입목적이 상실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게 한다. 즉, 행정관료의 집단이기주의가 행정편의

적 규제를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한 합리적 고려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규제목적의 달성함에 있어 정부는 기준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전적인 검사나 감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정책수립기능에 공개성을 도입함으로써 그 정책수립이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 후에 개최하는 공청회가 대체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토론과 검토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제가 시행된 후 그 잘못을 따지는 경우를 예방하게 함으로써 정책수립 전에 그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적체되어 있는 공무원 수를 불필요한 인력부터 해소시키고 능력있는 관료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문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관료들 사이의 경쟁압력을 제고시키는 등 공무원 임용제도를 경쟁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국내외 정보를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이 변화하는 국내의 시장여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운용의 틀을 지나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시장자율조정기능을 정상화하고 민간기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5.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물류비에 반영되어 제품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등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시설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발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조사에서 지적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지속하여 국토공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계로 변환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1983년 GNP대비 3.7%에서 1988년 2.1%로까지 축소되는 등 1980년대 이후 들어 적정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NP대비 사회 간접 자본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은 공급부족뿐만 아니라 수요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었다. 국내적으로 경제규모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 대외적으로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진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1982~1992년중 연평균 자동차 증가율이 27.1%인데 비하여 도로연장 증가율은 0.9%에 그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수요초과현상이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1994년 세계은행의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포장도로율은 세계 31위로 나타남). 또한, 승용차 한 대당 평균 연간주행거리는 일본에 비하여 2배,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도 50%가 많은 2만km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여건 사정으로 우리 기업의 매출액대비 물류비부담률은 '94년 현재 14%로 미국의 7%, 일본의 11%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한데 비하여 물류비의 추가부담은 5% 내외로 경상이익률과 물류비의 추가부담 격

차는 우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항만시설의 경우 부산, 인천 등의 주요 항만시설 확보율은 8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부두 규모가 부산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연간취급 물동량이 부산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국제화 시대에는 생산요소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세계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투자확대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정부는 투자우선순위를 높이고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재정만으로는 자본확충에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이 전담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선진화된 경영기법,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추진을 위해 '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시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특별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참여한다는 생각보다는 경쟁을 통해 공사에 참여한다는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민간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를 단지 경제력집중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할 때 민자유치법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에 못지 않게 수요억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가격정책으

로 제한만 하지 말고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 불요불급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6.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

이상과 같이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기업은 개방경제하에서 국제경쟁관을 확립하고 내부적인 문제점은 경영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지역문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적인 불균형 발전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국민

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선도적인 입장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국제규범에 맞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 사이의 표면화된 계층갈등 해소와 복지에 적극 나섬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위의 방안 외에도 우리에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문제점과 방안들이 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들이 노력하고 그 노력들이 경제성장의 재도약의 밑바탕이 될 때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交友, 須帶三分俠氣, 作人, 要存一點素心.

벗을 사귄다는 것은 반드시 10분의 3의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이 됨에는 반드시 한 점의 순결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 菜根譚중에서 -